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당 후쿠시마대책위, G7에 오염수 투기저지 협조 요청

- 일본 제외 G7 주한대사관에 서한 전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연대와 협력 요청 서한>

G7은 국제질서와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호에 대한 G7의 역할은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G7은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힘써왔습니다. G7 정상회의의 해양 환경 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7이 세계 시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우리 후손이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의원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뜻을 모아온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한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 없음
2.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해야하지만 오염수 저장탱크 중 20%에서만 표본 채취, APLS 제거 가능 핵종 62종 중 9개만 검사,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미분석 등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3. 일본 정부는 주변국 및 잠재적피해국에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음
4.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전세계로 확대시킴
5.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각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협약 192조 및 194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런던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법 제소로 불법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G7 국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전 오염수에 의한 해양 오염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희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별첨. 2021년 6월 29일 본회의 의결한 결의안 전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대안)

의안 번호	11177
----------	-------

제안연월일 : 2021. 6.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인 2022년에는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

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은 물론이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하였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처리에 대해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검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며,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서 해양방출 결정 전에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